

“이대론 중기 다 죽어...지속가능 미래산업 육성 서둘러야”

광주일보·중기중앙회 광주본부 ‘광주·전남 중소기업 성장 차기 정부 역할’ 좌담회

광주, AI 모델시티·모빌리티 신도시·교육·창업·실증 도시 조성 제안
전남, 석유화학·철강 산업 친환경·고부가 산업 재편 경쟁력 강화해야
조달청 “상반기 목표액 절반 이상 조속 집행해 지역경제 도울 계획”

내수 경기 침체와 함께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상황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지역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제37회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주)을 맞아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 발전 및 회생을 위한 대선 과제와 차기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좌담회는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이사)을 좌장으로,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이정환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본부장, 박상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전문위원, 윤선웅 국민의힘 전남도당 목포시 당협위원장,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과제와 사업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을 위해 가장 시급히 반영돼야 할 과제와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 이유는.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광주지역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청년 인구 유출, 창업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존과 성장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창업·디지털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21대 대선 공약 과제로 AI 모델시티·터브레인 광주,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교육·창업·실증 도시 조성 등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미래산업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전남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청년 특화구역 조성, 스케일업 실증 지원센터 조성 등이다.

전남 경제계의 주축인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위축과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고, 철강산업도 미국 관세 정책과 중국산 철강 덩핑수출 심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각종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등이 시급하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 사·도당은 지역 발전이나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당 차원의 공약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정환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본부장=민주당 광주시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공약과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역 혁신 중심의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역에 초광역 메가시티형 경제권을 구축하고, 행정·재정 권한도 대폭 이양해 자립형 지역 성장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AI·첨단의료·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광주형 미래산업특구’로 지정하고, 국비 투자와 인프라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금융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률 50% 달성, AI·로봇 기술 도입 보조금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윤선웅 국민의힘 전남도당 목포시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 기업 유지를 위한 정책 등을 반영했다.

특히 대기업 유치를 위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제 완화·토지 지원 등 투자 부담 완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 기관 예산 지원, 신기술·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지역인재



박상현(왼쪽부터)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전문위원,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 이정환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본부장,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이사),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 윤선웅 국민의힘 전남도당 목포시 당협위원장,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12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좌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들의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 지급, 권역별 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산업 육성과 성장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남지역에 더 많은 대기업이 유치된다면 침체한 지역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이 이어진다면 전남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통상 환경 급변과 저성장 국면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들다.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은 중소기업 생존과 안정적 성장,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광주조달청은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연간 조달사업 목표액(4조 3000억원) 중 을 상반기에만 절반 이상인 2조 3000억원을 신속 집

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수요기관을 방문해 마케팅·간담회를 열고, 조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조기 발주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기 발주 유도를 위해 상반기 조달 요청 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감경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또 공공조달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공공시장 진입(등록)부터 성장까지 조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공공조달길잡이’를 운영하고, 수시 상담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 등도 단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현황과 차기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차기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 연계 기반 강화와 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형성을 위한 혁신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광주는 AI 집적단지, 미래차, 에너지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을, 전남은 기존 철강·화학 등 소재 산업에서 에너지·농생명·바이오산업 기반전략산업

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중소기업과의 유기적 연계는 미흡한 단계다.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 생태계 형성과 신사업 창출로 지역 내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광주·전남·전북의 호남권 초광역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 거점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호남권 3개 지역의 에너지 초광역 동맹에 기반해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혁신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힘써줄 당부한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최근 복잡한 정치 상황,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수출 전망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인구, 제조업 분야 등 총 100여건의 현장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널리 전달되고 차기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라·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상의 일자리 지원정책

여수서 제2차 합동 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3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홀에서 미래내일일경협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2차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일경협 호남권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전남지역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1부는 미래내일일경협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2부는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내일일경협은 청년들에게 사업 참여 기관에서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정책이다.

설명회 참여 기관은 광주상의, 전남도(전남 일자리지원정책),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장려금), 여수상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국산



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훈련), 전남도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등 6개 기관이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전남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여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등

지역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로 전남권 지역 기업들이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GGM 노조 “노동 3권·2교대 시행 보장하라”

민주 중앙당·현대차서 기자회견

상생형 일자리 1호로 출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13일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상경 투쟁을 벌였다.

전국급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GGM지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 보장과 2교대 시행을 주장했다.

노조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GGM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첫 지역 상생형 일자리 1호”라면서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된 삶을 꾸리며 지역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꿈꾸도록 노동 시간 보장, 적정

임금 지급, 노사 공동 책임 경영 등의 취지는 GGM의 현실과 완전히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진 현대자동차 본사 기자회견에서 “노사민정 중재안이 파업권 제한 조항을 담고 있어 수용하지 않았지만 노사 평화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면 생산에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급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회사와 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회사 측 태도 변화가 없으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GM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업 10곳 중 6곳 “신입사원 1~3년 내 퇴사”

퇴사 이유 ‘직무 적합성 불일치’ 59%로 1위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이 1~3년 내 퇴사하는 ‘조기 퇴사’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입사원 조기 퇴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무 기간은 1~3년이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개월~1년 미만(32.9%), 3개월 이하(6.3%) 순이었다.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유로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가 58.9%로 1위였다.

이 밖에도 낮은 연봉(42.5%), 맞지 않은 사내 문화(26.6%), 상사 및 동료 인간관계(23.4%), 워라밸 부족(17.1%), 기타(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조기 퇴사가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시간과 자원의 비효율성(37.6%), 재직자들의 업무 부담 상승

(32.0%), 조직 문화 및 팀워크의 약화(15.9%), 재직자의 퇴사율 상승(13.9%) 등이 꼽혔다.

실제 신입사원 1명 기준 채용부터 실무 투입까지 들어간 비용은 50만원 이하(35.9%), 300만원 초과(21.5%), 50~100만원(17.5%), 200~300만원(12.6%), 100~200만원(12.6%)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8.42 (+1.09)
↑ 코스닥	731.88 (+6.48)
↑ 금리 (국고채 39년)	2.370 (+0.040)
↑ 환율 (USD) <오후 4시 49분 기준>	1421.70 (+19.30)

1분기 광주·전남, 건설·고용·인구 등 경기지표 하락세 지속

광주 제조업 생산 6.0% 상승

전남 석유화학 등 수출 19% 감소

올 1분기 광주·전남지역 경기가 생산 측면에서는 일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건설·고용·인구 등 대부분 경기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광공업생산지수는 올 1분기 기준 124.5로 전년 동기비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전기장비(22.2%), 담배(37.9%), 금속가공(12.4%)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7% 감소한 111.8을 기록했다지만, 예술·스포츠·여가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감소폭이 좁혀지면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 측면에서는 소매판매액지수는 97.2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다만, 이번 소매판매액지수 증가는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여파 및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추락했던 지역 소비로 인한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업태별로 대형마트(-6.6%)와 백화점(-4.6%)에서는 여전히 소비가 줄었고, 전문소매점(3.4%)과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2%) 등의 소비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건설한파’ 역시 지속됐다. 올 1분기 광주 건설수주액은 138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8.9%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90.8% 줄었고,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에서 94.8% 감소했다. 이 밖에 증가한 항목은 없었다.

또 고용률은 1.2% 하락했고, 광주 인구 역시 20대(-1795명)와 30대(-894명)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4945명이 순유출됐다.

전남의 경우 생산 측면에서 감소폭은 전년 동분기보다 좁혔지만, 그 외 대부분 경기지표가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올 1분기 전남지역 광공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0.9%, 1.6% 감소했다.

소비측면에서는 전남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증가한 반면 주요 소비처인 대형마트의 소매판매는 3.6% 감소했다.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규모도 1년전보다 19.3%나 줄어든 10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유(-30.9%), 석유제품(-29.2%) 등이 꼽혔다.

전남 역시 소비위축 및 건설한파로 인해 올 1분기 건설수주액이 63.9% 감소한 5528억원을 기록했으며, 공종별로 건축(-90.5%)과 토목(-52.4%)가 모두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